

민주당 철새정치인 철퇴... 탈당·경선 불복자 25%감점

총선 공천률 확정...정치 신인·여성에 가산점 부여 현역 재출마시 경선 의무화·의정평가 하위 20%에 감점 현역 단체장 잔여 임기따라 감점 30%...국민참여경선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탈당 경력자와 경선 불복자에 대해 25%의 감산을 적용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엄격한 공천 규칙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이번 총선 공천률의 특징은 현역 의원이 재출마할 경우 반드시 경선을 거치고, 의정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에서 득표수를 20%를 깎아 계산하는 반면, 경선·본선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과 여성에 대한 가산점을 높인 점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

고 민주당이 일찌감치 공천 규칙을 발표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지역정가도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일 민주당은 "지난 3일 발표된 공천 기준은 현역 의원에게 '한미경 검증'을 통해 무한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공천 규칙안에 따르면 어떤 당내 경선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으며, 시·도당 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아닌 사람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의 가산점을 받는다. 정치 신인이 여성이나 청

년, 중증 장애인이라면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받을 수 있다. 과거 공천심사에서는 가산점이 없었고, 경선에서만 10%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신인에게는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선 1년을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률이 정해진 점도 정치 신인으로서는 경선을 준비하기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은 의정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다면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각각 20% 감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의정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A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B씨가 경선에서 각각 10만표를 득표했다면 A의원은 8만표, B는 최대 12만표로 계산된다. 경선 불복과 탈당 등을 일삼은 '철새 정치인'들에 대한 감점 비중도 대폭 확대돼

이들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탈당 경력자와 경선 불복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심사는 10% 감점이지만, 경선에서는 감점이 25%로 확대된다. 민주당은 과거 공천심사에서 10% 감점, 경선에서는 20% 감점을 적용했었다. 또한, 중앙당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15~25%의 감점을 받는다. 현역 단체장의 무분별한 출마도 어렵게 됐다. 임기의 4분의 3 이상을 마치지 않고 보궐선거를 야기한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과거 10%였던 감점비중을 내년 총선에서는 30%로 높였다. 이밖에 민주당은 후보 간 심사 평점이나 여론조사 결과가 현격히 차이 날 경우 단수 공천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격한 차이'의 기준을 기존 심사 평점 20점

에서 30점으로 강화해 내년 총선에서 단수 공천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정치 신인과 여성 참여 폭을 늘렸고, 경선불복과 탈당 등을 일삼았던 정치인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쉽게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고 해도 의정 평가 하위 20%에 속하게 돼 20%의 감점을 받으면 가산점을 받게 되는 신인에게 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대부분 출마 예정자의 면면이 구제화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경선에 이번 총선 물이 큰 파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1년여를 앞두고 '게임의 규칙'이 정해져 경선 과정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지도부 사퇴해야”

바른미래 캐스팅보트 권은희 김관영 원내대표 만나 요구

바른미래당 역학 구도의 키를 쥐고 있는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 을)이 지도부 조기 사퇴를 요구했다. 광주 출신의 권 의원이 보수 성향의 바른정당에게 힘을 실으면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퇴진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번 김 원내대표를 만나 사퇴 결단을 이야기했다”며 “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인 제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전의 불신과 분열의 상황을 떠안고 물러나 뒤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도부 거취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의총 소집요구서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요구서에는 바른정당계 8명(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지상욱·하태경·정운천)과 국민의당계 7명(권은희·김삼화·김수민·김종호·신용현·이동섭·이태규)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의 과반이 조기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지도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결코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무일 “수사권 혼선 안돼”... 조국 “선택은 입법자 몫”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안 의견 제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면서 조국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안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경찰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의 사후 통제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결코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

은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경찰개혁안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의 통해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다”며 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을 함께 달성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검

찰과 경찰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제자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에 시대적인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저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4월 국회’ 시작도 못하고 종료

장관 임명 반대·패스트트랙 대치로 공전... 현안 산적

이달 7일 마감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의 공전이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4월 국회는 초반 박연성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주석 გადა보유-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한 채 차질을 빚었다. 이후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이 이어지며 4월 국회는 공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이 뒷전으로 밀

렸다. 특히,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대결 정국의 장기화마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당장 5월 국회에서 국민안전 확보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절실하다. 또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 산불과 같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각에선 주말과 어린이날 연휴가 지나고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8일)을 계기로 협상 모멘텀이 생겨 팍 막힌 대결 정국에 불씨가 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평화당 오늘 원내대표 추대 추진

불발시 후보등록 후 9일 선거

민주평화당이 7일 신임 원내대표 합의를 추진한다. 이날 합의 추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에 이어 7~8일 선거운동을 진행한 뒤, 9일 선거를 진행한다. 현재 유성엽·조배숙·장병완·천정배·황주홍(가나다순)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합의 추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 역학구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동영 대표가 전복 출신이라는 점에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 의원

이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내부적으로는 천정배 의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평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 농해수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장병완 의원은 원내대표 연임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당이 이날 원내대표 합의 추대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내부 신뢰에 금이 가면서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북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질량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음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북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362-3336 돌고개지점